

‘정치권, 대선 앞으로’... 여야 대권주자 몸풀기 시동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

민주 이재명 9일 사퇴... 본격 행보 김두관·김경수·김부겸 등 출사표 국힘, 김문수·홍준표·한동훈·오세훈 승부처 ‘중도층 선점’ 경쟁 치열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날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짝 채운 6월 3

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께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돌 전망이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경선을 관리한다.

다만, 대선일 지정 당일 사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이후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대표에 맞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중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나머지 주자들은 출마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주안에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친문(친문재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며 출마 의지를 밝혀온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들의 의

견을 더 잘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간표 아래 이번 주 경선 선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충격파 속에 주말 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서 서둘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경선 로드맵 제시에 발맞춰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 인근을 찾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경선에서 ‘찬반파’ (탄핵 찬성파) 대 ‘반찬파’ (탄핵 반대파)로 나뉘어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오늘 대선 계획·선거 대책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도 같은날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노태약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오는 6월3일 대선 선거일 지정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주권의 수호자 동상이 설치되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조기 대선 신중 모드’... “이번주 결정”

“후보 지켜보고 도민 의견 청취” ‘시간 촉박·정치적 부담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호남 대표 주자’로 급부상한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월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결심을 굳혔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4일 윤석열 파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곧 발표된다. 어떤 분들이 경선에 나올 지 잘 지켜보고 도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지는 가운데 김 지사가 예비경선 통과 가능성과 향후 표심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예상보다 늦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급박하게 진행되는 대선 일정 속에서, 김 지사로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당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출마 여부에 대한 고

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과거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연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어질 경우 전략적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지사는 ‘호남 대표 주자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성적표는 곧 호남 정치의 위상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일각에서는 도지사 3선 또는 국무총리직을 노린 계획된 출마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호남 대표 주자’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오히려 비호남권 유권자들에게 지역주의로 비취질 수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호남 출신 대권주자들이 연이어 고배를 마신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김 지사가 전국적 확장성과 당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는 시·도지사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는 사퇴해야 하므로, 김 지사는 이번주 중 대선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현 기자

우 의장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담화문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약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통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악순환을 반복하

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혁신·민주 비명계 “오픈프라이머리 결단을”

“추대 아닌 화합·통합 경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일각에서 6일 경선결과와 관련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대선은 민주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며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당 등 기존 야권이 모두 참여해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3일 각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인사가 제한 없이 참여해 ‘원샷’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진행되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 결정되고 조기대선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다시 이를 민주당 등에 제안한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정당에서 다시 대선 승리를 하자고 주장을 한다”며 “압도적인 승리의 정권교체를 해야만 완벽하게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모든 국민이 기존의 야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원봉을 들고나온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결집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